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10 / 2008.3.21

□ G20 기후변화회의의 구체적 합의 없이 마침

-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G8 Gleneagles Dialogue의 4차 장관급 회의에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책임에 관해서는 모두 다른 입장을 보임.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개도국들도 일부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는 반면, 개도국들은 경제개발을 위해서 감축을 거절하는 입장을 고수함.
- 영국의 블레어 전총리는 G20 국가들이 '2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피력함.
-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인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1톤인데 반해 미국은 20톤, 기타 선진국들은 10톤이나 된다고 지적함.
- 중국은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자금의 일부로 온난화관련 기술펀드를 조성하여 관련 첨단기술의 개발 및 이용 방안 모색을 주장함.

※ G20: 세계 에너지의 80%를 소비하는 상위 20개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그룹으로 중국, 인도, 한국, 멕시코, 호주, 인도네시아, 스페인, 폴란드, 남아공, 이란, 나이지리아, 브라질, G8이 포함됨.

(www.chinaview.cn, 2008.3.16)

NEWS

- G20 기후변화회의의 구체적 합의 없이 마침
- IEA, 중국-인도와 협력 강화 추진
-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산화탄소배출량 '30년도 최대30%감축
- 카자흐스탄, KPO에 환경세 부과
- 호주, 석유탐사 증진 계획
- Petrobras, Mitsui와 바이오에너지 회사 설립
- 볼리비아, 가스프롬과 협력
- 스위스, 이란과 가스공급계약 체결
- EU,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희망
- 폴란드-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 강화
- 모리셔스의 에너지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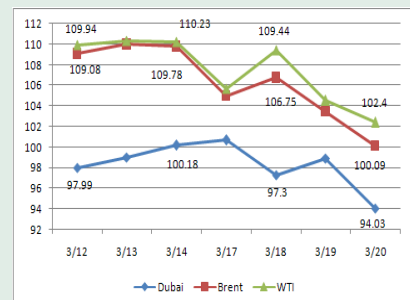
ANALYSIS

- 제35차 APEC EWG 회의 결과와 시사점
- OPEC이 증산을 해야 하는 이유
-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협상 결과

REPORT

- 경쟁적 전력시장의 장점

Oil Prices (Spot)



자료 : 한국석유공사



ASIA, AMERICA & MIDDLE EAST

□ IEA, 중국-인도와 협력 강화 추진

- IEA는 아시아 주요 석유소비국인 중국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향후 4~5년 안에 중국과 인도가 특별 회원국이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 IEA 사무총장은 전략비축, 에너지 절약 및 관련 기술적 사안과 관련하여 양국과 IEA간 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또한 이를 위해 중국과 인도 양국을 특별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안을 구상하였음.
- IEA 회원국 가입조건은 OECD 가입국이어야 하며, IEA는 회원국들에게 원유 순수입 기준으로 90일의 전략비축을 요구하고 있음.

(Platts, 2008.3.16)

□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산화탄소배출량 '30년도 최대30%감축

- 자원에너지청은 '30년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전망함.
- 최대한 노력할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년도에 '05년 대비 13%, '30년도에 22% 감축 가능함.
- '20년도까지 발전전력량에서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05년도의 30~40%로 상향 조정됨.
- 장기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산출된 '20, '30년도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예상량은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90년도 대비 '20년도에 3%, '30년도 13%가 될 전망이다.
- '20년도까지의 주요 대책은 원자력발전 비율의 향상과 태양광발전 도입 확대이며, 그 외에 고효율 급유기와 연료전지 등의 도입대수가 '05년도의 70만대에서 최대 2,800만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신형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차지하는 차세대형 자동차 비율은 '05년도의 약2%에서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함.



- 자원에너지청에 의하면 이산화탄소의 주축이 되는 원자력발전 비율의 향상은 수요자의 에너지효율개선과 원자력가동률 80%대의 유지, 전력 회사 공급계획에 포함된 신규건설계획의 추진을 전제로 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2008.3.19)

□ 카자흐스탄, KPO에 환경세 부과

- 3월 18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Karachaganak Petroleum Operating(KPO)에 대해 Karachaganak 유전에서 불법 가스배출에 대해 \$1,500만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국 석유 컨소시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북서부에 위치한 Karachaganak 유전의 매장량은 석유 및 컨덴세이트 12억 톤과 가스 1조 3,500억 m³에 이릅니다.
- KPO는 BG와 Chevron, LUKOIL, Eni간 체결된 Karachaganak 유전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으로, '97년 카자흐스탄 정부와 40년간 생산물분배협정을 체결하였음.
- KazMunaigas는 현재 가스프롬과의 협력 하에 Karachaganak 유전에서 생산되는 가스판매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Karachaganak 유전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07년에 카자흐스탄 최대 유전인 카샤간 유전에 대해서도 \$40억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국영 기업인 KazMunaigas에 자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FT, 2008.3.19)

□ 호주, 석유탐사 증진 계획

- 호주 천연자원 및 에너지부는 유·가스 탐사 촉진을 목적으로 '08년 중반경 탐사촉진 방안을 연방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천연자원 및 에너지부는 신규유전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호주는 '15년까지 석유제품수입으로 \$203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호주의 원유생산은 '90년대에는 자국 수요의 80%였던 반면, 현재는 20%만을 충당하고 있음.
- 호주의 원유 및 컨덴세이트 생산은 '0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07년 6월말 49.2만 b/d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Platts, 2008.3.18)

□ Petrobras, Mitsui와 바이오에너지 회사 설립

- Petrobras와 Mitsui는 3월 12일에 각각 50%의 지분 참여형태로 바이오에너지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함.
- 3억ℓ 규모의 일본 에탄올 시장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은 브라질에 건설될 예정임.
- Bioenergetic Complexes로 명명된 본 프로젝트는 바이오연료 생산시 필요한 에너지효율 최적화와 관련 친환경 기술 이전도 연계할 것임.
- 더불어 bagasse를 이용한 전력 개발 생산에도 투자할 계획임.
- ※ bagasse는 사탕수수를 분쇄하여 에탄올을 추출하고 남는 찌꺼기임.
- 브라질은 바이오에탄올 수출 1위국으로 연간 35억ℓ를 해외시장에 판매중임.

(EFE, 2008.3.13)

□ 볼리비아, 가스프롬과 협력

- 3월 17일에 볼리비아는 가스프롬과 향후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협정을 맺었고, 관련 보고서가 완성되는 90일 이후 YPFB가 과반수 지분으로 참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임.
- 볼리비아 Tarija 남부 Sinchal광구에 대한 지질조사가 수행될 예정이며, 이 지역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볼리비아 전체 예상 매장량의 85%인 1조 1,326억 m³임.
- 가스프롬은 Tarija의 2개 지역에 대해 \$20억 규모의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개발에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볼리비아는 러시아와의 협력이 내수시장의 투자를 진작하고, 아르헨티나와 브라



질에 대한 부족한 수출물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FE, 2008.3.17), (FT, 2008.3.17)

□ 스위스, 이란과 가스공급계약 체결

- 스위스 EGL사는 이란 국영 가스수출공사(NIGEC)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스위스는 이란으로부터 25년간 매년 55억 m³의 가스를 공급받게 되며, 약 100억~220억 유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 스위스는 에너지공급원 다양화를 위해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을 통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스위스로 공급될 가스는 이란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향후 그리스-알바니아-이탈리아로 연결된 Trans Adriatic Pipeline(TAP)이 이용될 전망이다.



- 미국은 이번 계약에 대해 UN의 대이란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스위스는 동 계약은 UN 결의안을 위배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의 에너지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함.

(Al-Jazeera, 2008.3.17)

EUROPE & AFRICA

□ EU,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희망



- EU 회원국들은 '08년 3월 14일에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07년 3월에 합의한 내용을 재차 확인함.
 - 상기 국가들은 '20년까지 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20% 확보 및 기준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0% 감축에 대해 합의한 바 있음.
 - 각 회원국은 '08년 12월까지 기후변화 대응책을 발표하여야 하며, '09년 상반기에 EU 의회와 최종합의를 도출해야 함.
- 일부 회원국들은 EU의 이와 같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20년까지 차량의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을 10%로 확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 프랑스는 EU의 강경책으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된 제3국으로 이전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EU 집행위는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세계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제3국의 수출품에 대한 과세 등의 형식으로 유럽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Les Echos, 2008.3.17)

□ 폴란드-아제르바이잔, 에너지 협력 강화

- 2월 27일 아제르바이잔과 폴란드는 에너지안보에 초점을 둔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인식되고 있음.
 -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유 의존도는 95% 이상으로 연간 2,30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가스수입은 140억 m³로 소비의 45%에 이름.
 - 러시아는 '04년과 '06년, '07년에 폴란드에 가스공급을 중단한 바 있고, '20년까지 폴란드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폴란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초점은 천연가스 수입원 다변화와 EU와의 전력송전망 연계에 있음.
- 아제르바이잔 역시 지중해-발틱 루트를 통해 원유수출을 희망하고 있어,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에 타격이 될 전망이다.
- 동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진행이 중단되었던 Odessa-Brody 파이프라인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이 보임.
- '01년 개시된 동 파이프라인은 우크라이나의 Odessa와 폴란드의 Brody를 잇는 것으로, 중유럽 시장을 염두에 둔 것임.
- 한편 '07년 폴란드의 PERN과, 우크라이나의 Ukrtransnafta, 리투아니아의 Klaipėdos Nafta, 그루지아의 Oil and Gas Corp., 아제르바이잔의 SOCAR는 '07년 10월 Sarmatia 컨소시엄 구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 동 컨소시엄은 Odessa-Brody 파이프라인 확장을 목적으로 구축된 사업으로, 수송경로는 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그루지아 Supsa항-흑해 유조선 이용 통과-Odessa-Brody이며, 이후 발틱해까지 연결될 계획임.

(UPI, 2008.3.17)

□ 모리셔스의 에너지정책 방향

- 최근에 발표된 '모리셔스 공화국을 위한 에너지정책' 보고서는 모리셔스의 현 에너지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제시함.
- 석유자원이 희박한 모리셔스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달러가치의 하락 및 석유수출국들의 원유증산 반대와 같은 세계정세로 인해 모리셔스의 에너지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모리셔스는 풍력 및 태양광의 잠재량이 풍부한 편이나 현재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에너지위기 타개를 위한 해결책으로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원의 활용이 적극 요구됨.
- 동 보고서는 에너지정책의 우선과제로 모리셔스의 에너지시장을 독점하



고 있는 State Trading Corporation의 투명한 운영 및 에너지공급원의 다양화를 지적함.

- 또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의 잠재량을 적극 활용하여, 수송부문에 에탄올, 발전에 풍력 및 바가스(bagasse), 온수공급에 태양광, 공공조명에 태양전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현재 모리셔스는 전력소비량의 15%를 바가스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L'Express, 2008.3.15)



1. 제35차 APEC EWG 회의 결과와 시사점

□ 개요

- 지난 3월 5일-6일 페루 이퀴토스에서 APEC Energy Working Group이 개최되어 역내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한 장단기 방안, 2009년도 EWG 연구과제 선정, 역내 에너지효율 정책에 관한 Peer Review 실행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세부내용

- Policy Dialogue(주제: 역내 청정 수송연료 보급 정책 및 프로그램)
 - 한국 : 국내 천연가스 보급 현황, 바이오디젤 보급 실적 및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소개로 회원국의 관심을 유인하였음.
 - 호주 : 차기 주제로 연료 기준, 세금, 보조금, 인센티브 등 액체 연료 및 에너지 안보에 대한 정책을 주제로 제안하였음.
 - APERC :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정보 미리 제출해주면 '배경문서' 작성 후 배포할 것임을 밝힘.
 - EGEDA :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차기 주제로 "Assessment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in addressing liquid fuel security(액체 연료 안보 관련 정부 정책의 평가 및 효율성)"으로 정하고 회원국의 동의를 얻음.
- JODI(Joint Oil Data Initiative)
 - 에너지통계분석전문가그룹(EGEDA)은 JODI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으나 시의성, 완벽성 등이 과제로 남아있음을 지적함.
 - 회원국들의 통계관련 능력배양을 위해 '08년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함.



- 기존 JODI를 보완한 확장 JODI는 '07년 4~9월까지 시험 운용 후 정식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회원국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07년 11월부터 6개월간 연장하였음을 보고함.
- 한국 대표는 IEA, OPEC 등 국제기구의 통계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나 JODI 통계의 활용도는 높지 않음을 지적하고 연간 통계자료 발간, JODI 통계를 활용한 연구보고서 제작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여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유도하였음.

○ 실시간에너지정보 공유체제(RTEIS)

- 일본은 '07년 10월 주요 에너지기반시설 보호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호주, 일본, 홍콩, 뉴질랜드 4개국만이 참여하였음을 보고함.
- 일본은 러시아가 주요 에너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APEC 긴급대응 연락네트워크(APEC Rapid Response Points of Contact Network for the Protection of Critical Energy Infrastructure)와 관련 회원국의 Contact Point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불참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러시아는 동 주제와 관련 추가적인 논의를 요청함.
- 일부 회원국들은 자료공개의 민감성으로 정보공유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제에 따른 담당자의 논의 참여가 필요함을 지적함.
- 의장은 회원국들은 주요 에너지기반시설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 개최를 위해 Contact Point를 제공하도록 제안함.

○ 메탄하이드레이트

- 한국 대표는 '07년 6월 세계에서 5번째로 동해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추출에 성공하였으며, 총 6억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고함.
-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은 제한적인 화석에너지, 고유가, 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APEC 회원국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역내 에너지안보 확보의 한 방안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관련 미국, 일본 등 회원국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함.



- 미국은 한국, 일본 등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고, EWG36에서 이 분야에 대한 양자, 다자간 협력 활동에 대해 보고할 예정임.

○ Peer Review on Energy Efficiency

- 에너지 효율부문에 관한 Peer Review(PREE)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며, 희망국가에 대한 PREE 수행과 역내 에너지 효율 정책의 종합 편찬을 PREE Mechanism의 주요 활동으로 제안함.
- 일본은 리뷰팀에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수행기관인 APERC은 리뷰팀에 참가할 전문가를 각 회원국이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
- 뉴질랜드는 차기 EWG회의 또는 EWG37에 발표를 위해 PREE에 참여할 것을 공식화 하였으며, 칠레는 EWG37에 발표를 희망함.
- 인도네시아는 IEA In-depth Review의 에너지효율 부문이 완료되는대로 EWG36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캐나다 및 호주는 PREE의 메커니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수행여부는 추후 통보할 것임.

□ 시사점

- Peer Review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7년 9월 홍콩에서 개최된 EWG34 회의부터 심도있는 논의가 시작되었음. APEC EWG34 회의에서 제기된 회원국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은 개정된 세부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승인을 얻었음. 일본과 캐나다는 일차로 Peer Review를 받을 것을 신청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IEA의 In-depth Review를 3차에 걸쳐 받은 바 있어 APEC Peer Review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겠으나, APEC 차원의 Peer Review를 받을 경우 차기 IEA In-depth Review를 받을 시기에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EWG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EWG 산하 전문가그룹의 통상적인 사업 뿐만 아니라 개별국에서도 연구사업을 제안하여 APEC 자금을 일부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보다 적극적인 EWG 활동 참여를 위해 연구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OPEC이 증산을 해야 하는 이유

□ 개요

- 3월 5일 OPEC 148차 정기총회에서 주요 석유소비국들의 증산 압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급상황을 근거로 OPEC은 생산쿼터 동결을 결정함.
- 이에 CGES(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는 'Monthly Oil Report'에서 OPEC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피력함.

□ 세부내용

- 세계 경제는 OPEC의 증산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OPEC은 3월 총회에서 생산쿼터를 동결하고 9월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혀 상반기 증산계획이 없음을 시사함.
 - 국제유가가 \$110/bbl 대까지 치솟고 국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계속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OPEC 증산을 통해 국제유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절실함.
 - OPEC은 현 수준에서의 증산을 과잉공급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세계 석유재고는 재고일수를 기준으로 사상 최저수준임.
 -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석유수요 위축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기침체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음.
- OPEC은 실제로 \$60~\$70/bbl 이상의 유가를 적정 수준을 판단하고 있음.
 - 3월 OPEC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 Ali Naimi가 국제유가가 \$60~\$70/bbl 이하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OPEC이 추구하는 유가 수준을 암시한 것으로, 이는 바이오연료가 경제성을 갖기 위한 유가 수준과도 관련 있다고 분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총회에서 동결에 합의한 것은 \$100/bbl 수준의 유가에 대해 문제의식보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임.
- 세계 석유재고 수준은 OPEC의 분석과 달리 매우 저조한 수준임.
 - OPEC은 OECD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석유재고 수준이 5년 평균치를 상회한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아시아, 중동 등의 석유수요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계 석유재고 측면에서는 부진한 수준을 보임.
 - 특히 예상 석유수요를 근거로 산정하는 재고지속일수는 신흥경제국들의 석유수요 증가로 과거 수 십년 대비 최저수준을 기록함.
 - OPEC의 예상대로 2/4분기 석유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더라도 세계 재고 지속일수가 평년수준을 되찾는데 그칠 것이고 OPEC이 우려하는 유가 폭락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경기침체가 아시아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시기가 유가 고공행진이 마감되는 시점으로 예상됨.
 - 유가 사상 최고치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석유수요 증가 추세는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석유 보조금의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위기에 따른 선진국들의 소비위축으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아시아의 석유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국제유가는 약세로 전환될 것임.

□ 시사점

- 세계 석유수급 상황이 우려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가 수준이 수급상황 대비 과도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 금융시장 불안과 달러화 약세가 유가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 할지라도 유가 수준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가능한 단기적 정책수단은 OPEC의 증산으로 판단됨.



- 세계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은 세계 경제가 경계하는 시나리오로써,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회복에 따른 투자 활성화 및 다양화가 국제유가 안정 및 인플레이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OPEC의 증산이 요구됨.

(CGES Monthly Oil Report, 2008. 3.17)

3.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협상 결과

□ 개요

- 3월 13일, 러시아-우크라이나는 가스협상을 타결하고 적어도 중앙아시아 산 가스 498억 m³를 '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00 m³ 당 \$179.5에 공급하기로 결정함.

□ 세부내용

- 이번 협상에서 결정된 여타 주요 사항으로는 양국간 가스거래에서 합작기업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임.
 - 향후 가스공급분부터는 합작기업인 RosUkrEnergo와 UkrGazEnergo를 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국영 가스회사인 Naftogaz가 양국간 국경에서 가스프롬으로부터 직접 가스를 구매하게 됨.
 - 대신 가스프롬은 4월 1일부터 최대 75억 m³의 가스(우크라이나 가스소비의 10%, 산업부문 소비의 25%에 해당)를 우크라이나 산업부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 RosUkrEnergo는 가스프롬과 우크라이나 사업가인 Dmitry Firtash와 Ivan Fursin 간의 50대 50 합작기업으로 '06년 양국간 협상 결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수입되는 모든 가스를 독점해 왔음.
 - ※ UkrGazEnergo는 Naftogaz와 RosUkrEnergo 간의 50대 50 합작기업으로 우크라이나 내 가스시장에서 산업부문 및 여타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해 왔음.
- 한편 '08년 1~2월 간의 가스공급분 중 19억 m³에 대해서는 러시아 측 요



구를 받아들여 1,000 m³ 당 \$315의 가격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해당 가격 분 만큼의 가스를 현물지급하기로 함.

- '09년부터의 가스공급분 가격에 대해서는 가스프롬이 중앙아시아산 가스를 구매한 가격에 연동하게 되어 가스공급 가격은 점차 인상될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과하는 가스에 대한 통과료는 '08년 기간 동안 고정될 예정이며 가스저장시설 사용료는 인상될 예정임.

□ 시사점

-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협상결과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의 합작기업을 배제함으로써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판매하여 얻게 되는 수익을 독점할 것으로 보임. 또한 우크라이나 산업부문 가스시장에 단독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됨.
- 대신 우크라이나는 '08년 대폭적인 가스가격 인상을 억제하였으며, '09년 가스공급가격을 가스프롬의 중앙아시아산 가스구입가격에 연동하여 점진적인 가스가격 인상을 유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09년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가스프롬이 중앙아시아산 가스를 유럽기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하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가스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WGI, 2008.03.19)/(Interfax, 2007.03.18)



1. 경쟁적 전력시장의 장점

□ 개요

-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NERA)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통적인 규제체제와 경쟁체제에 입각한 전력시장의 효과를 비교한 보고서(Competitive Electricity Markets: The Benefits for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를 발표함.

□ 세부내용

- 전통적인 규제체제에서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전력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일부 나라들은 가격상승을 경험함.
 - 가격상승의 원인을 시장경쟁체제의 실패로 인식한 몇몇 국가들은 전력 시장을 규제 시장으로 전환함.
 - 그러나 가격상승의 시점이 전력시장이 경쟁체제를 도입한 시점과 일치하지 않음.
- 경쟁시장과 전통적인 규제시장과의 특징 비교

	경쟁시장	규제시장
투자	기업이 이윤 창출이 가능할 때 투자	적정한 투자보수를 규제하에서 투자
가격 결정	소비자의 선택에 기초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 결정	비용회수에 근거한 규제가격 설정
시장 구조	여러 회사가 경쟁	일반적으로 독점 기업
설비투자	소비자의 수요에 반응하여 기업은 규제시장에 비해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함.	정부의 설비투자에 대한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비용에 기초한 투자나 기술진보를 유인하는 투자가 아닐 수 있음.
기업의 재무 구조	투자위험은 크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음.	기업이 더 많은 부채를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을 보임.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	투자자	소비자



시장의 활동성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고,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업일수록 더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동태적임.	관료주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정태적임.
비용 분담	창출한 가치에 기초해 분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있음.	평균비용 개념으로 요금을 결정함.
기업 성공을 위한 요소	가격, 기간, 비가격 요소를 가지고 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	의사 결정에서의 신중함과 시장실패 극복 능력
수직적 통합	규제와 경쟁 활동이 수직적 분할됨.	명령의 내부 시스템에 의해 수직적으로 통합함.
위험과 수익 기대치	위험과 기대수익은 상대적으로 크고 이는 주주들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침.	위험과 기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음.
마케팅	마케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혁신적인 상품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의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춤.	전체 소비자를 위한 단일한 전략에 초점을 둠.
가격 안정성	가격 안정성이 소비자들의 요구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시장은 이에 적합한 상품을 제공함.	규제절차상의 지연 때문에 요금은 느리게 반응함.
가격 신호	가격은 한계비용에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함.	요금결정과정에서 소매가격은 한계비용을 왜곡시킴.

- 시장체제를 바탕으로 한 전력 시장의 장점들은 아래와 같음.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쟁시장은 소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줌.
 - 전력 공급이 시장 수요와 일치하는 결과를 가져옴.
 -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은 국가 전체 전력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함.
- 정책 결정 시 정부는 아래의 사실을 고려해야 함.
 - 최근에 나타난 전력가격의 상승은 유가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시장과 규제시장 모두에서 발생함.



- 규제 시장에서의 전력 생산 독점 기업은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시킴.
- 경쟁시장을 통해 결정된 가격은 에너지 효율성과 소비자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도와줌.
- 경쟁적 전력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높임.

※ EIA에 따르면 '00년 대비 '05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는 규제시장의 경우 0.6%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경쟁시장은 11.3%의 성장률을 나타냄.

- 경쟁시장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규제시장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경제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명백함.

□ 시사점

- 해외 전력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전통적 규제체제와 경쟁적 시장체제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임.

(NERA, 2008.2.)